

자료제공: 2023. 03. 28.(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02-2133-8010
안전정책팀장	김상우	02-2133-8023
담 당 자	정유빈	02-2133-8032
현장대응단장	손병두	02-3706-1700
현장지휘팀장	김길중	02-3706-1710
담 당 자	황영규	02-3706-1711

서울시, 유관기관 협력 기반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 3.28.(화) 오전 9시 50분 시청사, '2023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 '긴급대응기관협의회' 합동 개최
- '안전관리위원회'에서, '23년 시 안전관리계획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등 심의·의결
- 재난 초기대응 강화 위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합동 개최...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
- 올해 서울시 안전관리 방향 확정, 재난 초기대응 강화와 통합적 현장지휘체계 마련
- 재난 관련 기관과 협력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안전 서울, 시민 행복' 정책 본격 추진

서울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합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28일(화) 오전 9시 50분 서울시 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합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관리계획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심의, 관계기관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7조에 의해 총 40명(당연직 5명, 임명직 17명, 위촉직 18명)으로 구성,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시는 지난 2월 28일(화) 현장 중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 수립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계와 통합대응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주재(위원장)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2부 시장(부위원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관련 전문가 등 총 3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안) ▲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재난대응분야) 폐지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이번에 심의·의결된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은 ‘안전 서울, 시민 행복’의 비전을 가지고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 재난관리체계의 실질적 기능 활성화, 시민 체감 안전 증진 등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방안과 재난 및 안전사고 61개 유형별 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두 번째 안건인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 등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계획으로, 생활밀집시설(공동주택, 학교 등)과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등) 등 사회전반에 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고자 한다.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개월간 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해 건축시설 등 2,389개소(잠정)를 점검할 예정이다.

- 세 번째 안전 심의로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폐지되고,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일원화된다.

- 특히,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대책’ 유형도 추가되었다.

<통합적 현장 지휘체계 마련 및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사고 대응력↑…‘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 한편, 서울시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이어 통합적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 등에 따라 지역단위 재난대응 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 등 10개 기관 총 12명이 참여하는 ‘긴급대응기관협의회’는 서울시장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다수기관이 참여하여 작성한 합동 계획서로서 재난 발생이 현저히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 활동 및 통합적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지원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수도권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kt강북/강원네트워크운용본부장 등

-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재난현장 대응단계에서 긴급구조활동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는 자연재난 등 동시다발적 피해 발생에 대비한 광역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핵심기능 중심으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도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축인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안전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 부서의 총력과 더불어, 관계 기관장 및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3. 3. 28.(화) 09:50 ~ 10:50 (60분) /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긴급대응기관협의회 위원 37명
 - (대면참석) 시장, 수도권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안전총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긴급대응기관장 등 12명
 - (영상참석) 행정2부시장, 실·본부·국장, 재난관리 유관단체장, 전문가 등 25명

□ 주요안건

- (안전관리위원회) ① 2023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② 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심의
 - ③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폐지 심의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①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관련 주요 사항
 - ② '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심의의결서 의결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09:50~10:00	(10')	① 참석자 소개, 위원장 및 주요인사 인사말씀	(사회: 안전총괄과장)
10:00~10:25	(25')	②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안전 총괄실 장
	10'	- '23년 시 안전관리계획(안) 수립 주요사항	
	03'	- '23년 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수립 주요사항	
	02'	-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매뉴얼 폐지 사항	
	10'	- 안전관리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10:25~10:45	(20')	④ 서울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소방재난본부장 (사회: 현장대응단장)
	10'	-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주요 사항	
	10'	- '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심의의결	
10:45~10:50	(05')	⑤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서울 특 별시 장

